

2008 안산시정

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

본 내용은 법령 확정 및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
인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안 산 시

목 차

1. 전국 공통	-----	1
① 세재분야	-----	1
② 금융분야	-----	3
③ 부동산·교통	-----	4
④ 교육·노동·환경	-----	5
⑤ 법무·경찰	-----	7
⑥ 보건복지·과학기술	-----	9
⑦ 문화·여성	-----	12
⑧ 농림·해양	-----	13
⑨ 행정	-----	14
2. 경기도·안산시	-----	15

1. 전국 공통

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『새해 달라지는 제도』를 종합, 정리한 자료임

1] 세재분야

☞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

과세표준		세 율
현 행	변 경	
1,000만원 이하	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8%
1,000만원초과 4,000만원이하	1,200만원초과 4,600만원이하	1,200만원 초과금액의 17%
4,000만원초과 8,000만원이하	4,600만원초과 8,800만원이하	4,600만원 초과금액의 26%
8,000만원초과	8,900만원초과	8,900만원 초과금액의 35%

☞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

- 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 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

☞ 출산·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

-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,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·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

☞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설

-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준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

가맹 등)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허용

☞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

- 현재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,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부터 기준금액이 폐지
-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 부여

☞ 기부금 공제 확대

-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%에서 20%로 확대되고,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

☞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

-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~5년이면 양도차익의 10%, 5~10년이면 30%, 15년 이상이면 45%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
- 올해부터는 각각 10%, 45%인 최저, 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부유자에게 10%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%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

☞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

-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확대
-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됨

☞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

-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이 20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%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

☞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

-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(LPG) 프로판 및 가정용 LPG, 취사 난방용 액화천연가스(LNG)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% 탄력세율이 적용 가격 인하

② 금융분야

☞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

-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

☞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

-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됨

☞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

-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

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짐

-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

☞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교차판매 허용

-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(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)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

☞ CD, ATM 운영 감독 강화

-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(VAN사업자)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

☞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 개선

- 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

③ 부동산 · 교통

☞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

-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

☞ **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**

-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 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함

☞ **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**

- 재건축,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재 5분의 4(80%)에서 완화돼 4분의 3(75%)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

☞ **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**

-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폐지
-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,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됨

4] 교육 · 노동 · 환경분야

☞ **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**

-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
-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, 2010학년도에는 同 제도가 정착,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

학대상

☞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

-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

☞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

-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·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짐

☞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

- 내년 3월부터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는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 가능

☞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

-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~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

☞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

-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

☞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

- 1월부터 인원수 100인(연면적 430㎡)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(연면적 860㎡)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

☞ 생활소음·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

- 체력단련장업, 체육도장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, 음악교습학원, 음악교습소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의 적용 대상에 포함

☞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·시행

- 껌, 담배, 살충제, 유독물 용기, 부동액, 화장품 용기, 1회용 기저귀,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
-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%를 적용

☞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

-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, 망간전지,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(RPR)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

⑤ 법무·경찰

☞ 국민참여재판 시행

- 1월부터 「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어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음
-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~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·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☞ 새 신분등록제 실시

- 호주제 폐지에 따라 1월부터 호적부 대신 「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」 사용
- 본적을 대신해 ‘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’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

☞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

-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·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,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
- 고액·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(監置)까지 될 수 있음

☞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

-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
- 결혼·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

☞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

-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.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됨

☞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

-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민 편이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, 등기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됨

☞ 상법(해상편) 개정안 시행

-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·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,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

☞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

- 정부의 전·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될 예정

☞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기2청 신설(계획)

-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내년에 '경기2청'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

⑥ 보건복지 · 과학기술

☞ 국민경장보험료 조정

-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.4% 인상

☞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

-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(45등급)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부과·징수

☞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

-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
-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,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음.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

☞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

-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음

☞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

- 국민연금법 개정예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

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%에서 1월부터 50%로 인하

-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.5%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%로 인하

☞ **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**

-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%에서 50%로 높아짐
-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월부터 새로 10%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

☞ **장제비 급여 폐지**

-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

☞ **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**

-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, 국제 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

☞ **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**

-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%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%(최대 8만4천 원)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1월부터 시행
- 다만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

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, 노인 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 연금을 먼저 지급받고,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

👉 노인 장기요양보험

- 올해 7월에 시행될 「노인장기요양 보험법」에 의해 고령,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, 가사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
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

-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

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

- 사회복지사 7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

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

-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어 E-6(예술홍행), E-10(내항선원), H-2(방문취업)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 가입자 신청이 가능

7 문화·여성

👉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

-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·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시범실시 예정

👉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

-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.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을 현재 준비작업 진행중

👉 문화재수리시술자·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

- 문화재청에 주관하던 것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

👉 여성가족부 ‘가족친화인증제’ 도입

- 6월 시행될 예정인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
-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

👉 ‘아이 돌보미’ 사업 확대

-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‘돌보미’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

👉 결혼이민자 대상 ‘찾아가는 서비스’ 확대

-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‘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’와 ‘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’ 확대 실시

⑧ 농림·해양

☞ 반려동물(애완동물) 등록제 도입

-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시장·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 시행

☞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

-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

☞ 인삼·쌀 표시제도 개선

- 내년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

☞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

- 8월 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

☞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

- 금년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·허가, 수질관리 등이 시작

☞ 공유수면 불법매립 처벌 강화

- 내년 6월부터 10만㎡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

☞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

-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함

9 행정

☞ 주민등록 재발급 불편 해소

-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·면·동 어디서나 가능

☞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

-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·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50%에서 금년부터 75%로 늘림

☞ 폐쇄회로(CC)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

-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

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

👉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

-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‘삭제청구권’이 신설되고, ‘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’ 도입

👉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

-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,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

2. 경기도 · 안산시

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진 경기도와 안산시의 제도를 종합, 정리한 자료임

〈경기도〉

👉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

-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‘수도권 통합요금제’가 좌석(광역)버스까지 확대 시행

👉 영세아보육제도 시행

- 경기도에서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 교사가 1: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

-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가능,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

☞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

- 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
- 시설정원은 총 5인 이상, 1:1이나 1:2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, 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

☞ 취업여성 보육지원

- 종전 둘째아 이상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 국공립 보육료의 70%를 지원하던 것을 취업여성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첫째 아는 국공립 보육료의 20%를 지원하고 둘째 아 이상은 50%를 지원

☞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

- 도내 보육정보센터 9곳에서 전담, 1:1 교육
- 도내 거주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. 관리운영 수당, 교육비,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등 지원

☞ 청소년문화존(Zone) 지원 조정

- 종전 도 단위 문화존 7개를 운영하고 7곳당 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개로 축소하고 1억원 지원. 시·군 문화존 11개 지정해 3억8천만원 지원

☞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

-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공모
- 도내 59개 단체 중 최대 10개 단체 선정해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

☞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

- 학습권 침해에 따라 축구, 테니스, 수영, 태권도 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에 전면 금지됨. 놀토나 휴일에 대회 개최

☞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제 시행

- 「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운영규정」에 따라 1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예보제 운영

〈안산시〉

☞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

- 범죄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구청별로 운영중인 방범용 CCTV 관제상황실을 안산시 통합관제센터로 구축 운영

☞ 전자민원(G4C)서비스 교육 홍보단 운영

-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이용하도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

육 홍보단 운영

☞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

- ‘공간질 제조, 마을 리더 육성, 지역공동체 형성’의 마을만들기 3대 과제를 추진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개시

☞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추진

- 올해 3월부터 정기적, 다량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17개 세목을 우선 선정하여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트(<http://www.giro.go.kr>)를 통해 납부

☞ ARS 연계 지방세 수납시스템 도입

- 시중은행의 납세고지서 수납기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ARS(자동응답수납시스템)을 지방세 전산DB와 연결하여 24시간 납세안내 및 수납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

☞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

- ‘행복도시 안산비전’ 수립에 대한 세부추진방안 수립에 자문역할을 수행할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
 - ※ 6개 분과위원회 : 산업경제, 문화관광, 건설교통, 보건복지, 환경, 행정

☞ 안산 Memorial Park(추모공원) 조성

-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공설장사시설 설치사항이 자치

단체 의무사항을 규정됨에 따라 주민자유제안 공개모집을 통해
최첨단 추모공원 조성

☞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

- 올해 5월중 와~스타디움에서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
여 도민화합 및 축제의 장 조성
※ 참가규모 : 31개 시·군 10,000명 / 경기종목 : 3개부 20종
목

☞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추진

- 올해 말까지 단원구 원시동 782번지에 위치한 원시운동장을 주
민수요에 맞춰 리모델링 추진
- 리모델링 내용 : 축구장 인조잔디로 변경조성, 우레탄 트랙 조
성, 테니스장 2면, 우레탄 농구장 1면, 족구장 2면
신설

☞ 스타 ★ 돔 스타디움 건립 추진

- 와~스타디움 인근에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인 가칭 ‘스타 ★ 돔
스타디움’을 민자유치로 건립하여 안산시를 스포츠 메카로 조성

☞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추진

-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과
학교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
이행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여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
사업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시행

☞ 성안어린이집 건립

- 9월에 상록구 사동 1557-2번지에 지하 1층/지상 2층의 어린이 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에 보육기능 향상

☞ 시민행복관 건립

- 단원구 고잔동 620번지에 위치한 기존 안산시 시장관사를 안방 체험실, 예절교육실, 도서사랑방을 둔 시민행복관으로 조성하여 안산시 거주 외국인 등의 전통 체험의 장소로 활용

☞ 농업기술센터 건립

- 8월에 상록구 사동 1584번지에 지하 1층/지상 4층의 병해충진단 실, 교육장, 농업자료실, 전시실 등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건립

☞ 원곡보건지소 신청사 이전 확대

- 1월에 일반진료실, 치과실, 한방진료실을 갖춘 원곡보건지소 신청사로 이전하여 외국인근로자 진료인원을 기존 2,300명에서 5,000명으로 확대 진료

☞ 수인선 협궤철로 생태·문화공간 조성

- 중앙역에서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3.8km 구간의 철도부지를 도심 속 자연생태 및 문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협궤철로 복원사업 추진

☞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 도입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 법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지 방법을 병행고지, 전자고지, 종이고지로 나누고 납세자가 전자고지만 이용할 경우 건당 500원의 인센티브 부여

☞ 외국인 주민센터 개소 운영

- 1월에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화·교육·의료 등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인 지하 1층/지상 3층의 외국인 주민센터 개소 운영

☞ 상하수도 요금관리 웹(Web) 시스템 운영

- 전국 어디서나 상하수도 요금 내역 및 수납·체납 상황을 조회하고 조회 완료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시

☞ 단원구청 부동산 정보센터 통합창구 운영

- 부동산 관련 업무가 여러 창구에 분산되어 불편함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창구 개설 운영(단원구 종합민원실)